

亞·太地域內 經濟協力體의 構想 및 展望

李 庸 完*

目 次

- | | |
|------------------------|---------------------------|
| I. 序 | 2. 亞·太 經濟協力의 필요성 및 제약요인 |
| II. 經濟統合의 理論的 접근 | IV. 亞·太地域內 經濟統合 構想 |
| 1. 經濟統合에 대한 理論的 접근시각 | 1. 域內 統合관련 諸構想의 전개과정 |
| 2. 經濟統合論의 分析對象 | 2. 최근의 주요 經濟協力 추진현황 |
| 3. 地域블럭화와 經濟統合의 類型 | 3. 經濟協力構想에 관한 各國의 입장 |
| III. 亞·太經濟圈의 형성 | 4. 域內 經濟協力體의 構想 |
| 1. 亞·太 經濟圈의 특성 | V. 結 論 |

I. 序

오늘날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일본 등을 포함한 선진국과 아시아 NIES, ASEAN제국의 경제는 활발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국가간에 무역, 투자, 기술의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각국의 경제구조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아시아-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태평양 경제권은 지리적으로 광활하고 역사적·문화적 제조권 그리고 정치 경제적 발전단계가 서로 상이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러한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권의 주요국가들은 지난 20여년간 고도의 경제성장을 유지시켜 왔으며 이들 무역의 절반 이상이 역내에서 이루어져 왔다. 특히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세계 어느지역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며 이지역의 역동적인 잠재성을 일깨워 줌으로써 21세기에 가장 주목받는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내 경제적 관계가 긴밀해져 감에 따라 역내 국가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 일고 있는 지역별 경제의 블럭화 및 역내에서의 경쟁과 통상마찰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域內的 공동이익과 번영을 위한 긴밀한 상호의존관계의 유지, 경쟁의 격화에 따른 긴장과 마찰을 사전적으로 조정할 경제統合

* 濟州大學校 時間講師 및 濟州道 通商政策 專門委員

體의 형성의 필요성이 점증되고 있다.

따라서 아·태경제권이 세계경제활동의 중심이 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域内の 공동이익이나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체 내지는 統合體의 구성이 현실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바,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갖고 최근 논의 되고 있는 아시아-太平洋地域(이하 亞·太地域이라 칭함)의 經濟共同體構想과 그 움직임을 파악한 후, 그 전망과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經濟統合의 이론적 접근

1. 經濟統合에 대한 이론적 접근시각

1) 自由貿易주의적 접근

經濟統合에 대한 초기학자들의 주요 관심은 관세동맹의 형성이 회원국의 무역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의 분석에 집중되었다. 즉 회원국간 貿易거래에 있어서 존재해 오던 차별대우(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를 철폐함으로써 域内 비교우위에 따른 생산의 특화가 추진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득(貿易창출)이 과연 비회원국으로 부터의 수입을 저해하는데서 오는 손실(貿易전환)을 상쇄하기에 충분하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정태적인 자원배분의 효과가 중심을 이룰 수 밖에 없었고 대부분 自由貿易주의적 접근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J. Viner는 關稅同盟이 貿易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自由貿易주의적 조건을 열거하였고 그의 이론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국가간 대체만을 전제로 하였던 것이다.

한편 이미 고전이론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統合에 따르는 동태적 효과(dynamic effects)나 교역조건에 관한 연구는 60년대 들어오면서 활발히 진행되었는데¹⁾ 우선 동태적 측면에서는 회원국간 시장統合에 의한 광역시장(enlarged market)의 효과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동안 경제적 장벽에 의하여 고립되어 왔던 국민경제단위의 생산물 및 생산요소시장간의 統合이 실현된다면 이론적으로 볼때 내부적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및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를 가져 올 수 있다.

2) 保護貿易주의적 접근

1965년에 거의 동시에 발표된 C. A. Cooper-B. F. Massel과 H. G. Johnson의 논문은 經濟統合理

1) 대표적 저서와 논문으로서 B. Balassa,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Allen & Unwin, 1962, R. A. Mundell, "Tariff Preference and Terms of Trade", the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 and Social Studies, Vol. 32, 1970.

論의 전개과정에서 하나의 전환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²⁾ 즉, 고전적 이론들이 自由貿易主義적 시각에만 집착했던데 반하여 이 두논문은 공통적으로 이 효과에 더하여 비회원국에게는 확대되지 않는 保護 및 특혜조치가 회원국경제에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을 동시에 중요시하고 있다. 사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나 후생효과만을 고려한다면 關稅同盟을 비롯한 경제統合은 하등의 의의를 갖지 못하며 보다 적절하고도 무차별적인 保護조치의 일방적인 완화가 더 이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次善의 理論』이 말하여 주듯이 어떤 형태이든간에 경제統合의 추진 그 자체는 그 이전상태에 비하여 또 다른 왜곡을 초래하므로 항상 더 나은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H. G. Johnson의 지적처럼 일부 국가들은 공동으로 經濟領域(economic boundary)을 설정하고 비회원국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는 역외국가들에게는 상대적으로 保護주의적 성격을 띄게 마련이다.

한편 關稅同盟은 역외국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를 부과하고, 가맹국 상호간에는 관세를 철폐 내지 경감함으로써 差別關稅의 전형적 사례가 되고 있는데 관세동맹이론은 이와 같이 차별관세를 분석대상으로 함으로써 관세이론에서 하나의 특수한 분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일국단위의 貿易제한효과뿐만 아니라 地域단위의 집단적 貿易제한효과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保護主義的 특성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다.

2. 經濟統合論의 分析對象

경제統合이론은 독립된 국민경제간 統合의 형태(自由貿易地域, 관세동맹, 공동시장 및 경제동맹), 메카니즘 취지 및 경제적 효과 등을 다루고 있다. 이와같이 統合이론이 일견하여 국제경제이론의 특수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나 동시에 어떤 統合의 형태를 추진하느냐에 따라서는 폭넓게 경제이론과 응용을 포용하고 있다. 경제統合은 특정국가들간 다른 제3국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경제적 혜택의 교환을 내용으로 하며 이러한 배타적인 혜택은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특정경제적 목표의 실현을 취지로 하고 있다. 경제동맹의 예를 든다면 회원국간 貿易, 재정 및 금융정책에 있어서 협의 내지 조정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효과나 협력모형의 선정은 결국 각 분야에서의 정책적 적용에 기초할 수 밖에 없다.

한편 경제統合의 경제적 효과는 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로 대표될 수있으며 실제로 지금까지 경제統合의 순수이론은 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를 규명하는 관세동맹이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던

2) C. A. Cooper and B. F. Massel, A New Look at Customs Union Theory, Economic Journal, Vol. 75, 1965. alc H. G. Johnson, An Economic Theory of Protectionism, Tarriff Bargaining and the Formation of Customs Un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3, 1967.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관세동맹에서는 가맹국간에는 貿易自由화가 꾀해지는 반면,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貿易차별화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므로 관세동맹은 自由貿易과 관세에 의한 保護貿易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관세동맹이론과 여기에 기초를 둔 경제統合이론은 自由貿易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自由貿易이론의 한 부문이기도 하며, 동시에 관세부과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保護貿易이론의 한 분야이기도 한 것이다.

3. 經濟블력화와 經濟統合의 유형

經濟統合 또는 經濟블력화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공통된 역사 문화적 배경을 가지며 경제적으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특정 국가들간에 상품 및 생산요소의 自由이동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독자적인 광역시장권을 형성하고 나아가서는 재정, 금융 등 경제전반에 걸쳐 상호협력력을 증대해 나가는 地域的 經濟協力관계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와같은 경제의 블력화 경향은 80년대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그 결합정도도 심화되고 있다. 그 배경은 70년대 日本경제의 부상과 80년대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대두로 EC와 美國의 상대적 지위가 저하되고 산업 및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地域주의 경향이 대두되고 다자간 貿易체제가 약화된데 있다고 할 수 있다.

經濟統合의 유형은 그 내부결속도에 따라 自由貿易지대-관세동맹-공동시장-경제동맹-완전經濟統合의 5단계로 구분, 설명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表 II-1〉 經濟統合의 유형

	自由貿易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經濟統合
域内관세 철폐	◎	◎	◎	◎	◎
수입할당제 폐지	◎	◎	◎	◎	◎
공동 대외관세		◎	◎	◎	◎
생산요소 이동			◎	◎	◎
경제정책 조정				◎	◎
초국가기구 설립					◎

Ⅲ. 亞·太經濟圈의 형성

1. 亞·太 經濟協力の 필요성 및 제약요인

亞·太協力は 이미 1960년대부터 그 필요성이 인식되어 태평양경제협력회(PBEC : Pacific Basin Economic Council), 태평양개발貿易회의(PAFTAD : Pacific Trade and Development Conference), 태평양經濟協力회의(PECC :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등을 통해 다각도의 亞·太經濟協力방안을 제시하여 왔는데 최근 급속히 대두되고 있는亞·太地域經濟協력은 의의는 과거와는 다른 현실적인 필요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亞·太地域국가들이 지닌 상호보완적인 산업 및 貿易구조에 따라 域內貿易활동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되면서 특히 1980년대에 들어와 貿易의 域內집중이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투자, 기술, 금융분야에서의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으며, 또한 亞·太地域의 급속한 경제성장 과 貿易의 域內집중현상은 域內분업 및 비교우위구조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과정에서 域內 각국간 성장율의 격차와 상이한 구조조정의 진전으로 각국간 경쟁과 마찰이 증가하였고, 고도성장국에 의한 域內 과잉공급문제의 대두와 자원에너지 수요의 급속한 확대를 초래 하는 등 여러가지 불안정한 요인이 노정되었다.

특히 1980년 이후 美國은 日本과 아시아NIEs의 대미수출을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각종 保護주의적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쌍무적 통상마찰을 야기하였고 이는 곧 亞·太地域경제의 성장과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불안정 요인을 제거하고 亞·太地域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쌍무적 협력관계나 시장메카니즘을 통한 조정이 아닌 地域차원에서의 정책조정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된 것이다.

한편 1970년대 이후 각국간 貿易경쟁의 심화, 자원민족주의의 대두, 남북문제의 첨예화 그리고 美國경제의 상대적 우위성상실 등에 따라 재연되기 시작한 保護貿易주의는 GATT체제하에서의 自由·무차별적 貿易체제를 약화시켜 왔는데 특히 美國의 貿易적자에 따른 국제적 지위의 저하는 국제貿易질서 유지자로서 美國의 역할에 제약을 가하게 되었으며, GATT의 다자간 협상방식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80년대에 들어오면서 과거 GATT체제의 주축국이었던 美國 등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자국의 貿易문제를 정부개입에 의한 쌍무적 교섭을 보다 중시하는 협정에 의해 해결하려는 地域주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地域주의가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게 됨에 따라 세계貿易질서를 회복하고 여타地域에서의 地域주의가 폐쇄적 경제블럭화로 진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亞·太地域內에서 地域차원에

서의 공동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한층더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域內 經濟協力の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현실적 제약요인 즉, 첫째, 亞·太地域의 문화·정치·경제 등 모든측면에서의 다양성으로 인한 공통된 합의 도출의 어려움 둘째, 域內국가들간의 경제발전의 격차, 자원보유의 차이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다양한 경제정책의 조정제약 셋째, 經濟協力を 위한 統合體의 운영체제 및 성격에 대한 상반된 입장 등의 현실적인 제약에 부딪혀 아직까지 아시아-태평양 經濟協力を 위한 구체적인 경제統合體의 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亞·太地域의 경제적 여건

亞·太地域은 日本·ANIES·ASEAN·중국 등의 동아시아 地域국가, 美國·캐나다·칠레 등 美州태평양地域 국가, 그리고 호주·뉴질랜드 등의 태평양국가들로 구성되는 광범위한 經濟圈域이다. 또한 亞·太경제는 경제발전단계, 경제규모, 자원부존도 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 등 다양한 양태를 보이고 있어 亞·太經濟圈의 특징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亞·太경제의 공통분모를 찾아보는 것은 同 地域經濟協力の 당위성 및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1) 亞·太地域의 다양성

亞·太地域은 국가 구성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의 발전단계를 비롯하여 자원의 부존 문화, 역사, 민족, 종교 등 지극히 다양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타 經濟圈과는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의 地域만 보더라도 「아시아는 하나」가 아니다. 즉 문화적으로는 동양문화와 서양문화가 공존하고 있으며 산업구조면에서는 美國,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이 주요 자원부존국 이면서 고도산업국가가 있으며 日本과 같이 자원수입가공형 고도산업국가가, ANIES와 같이 자원수입가공형 중진공업국 그리고 ASEAN과 같이 개발도상의 자원생산국들이 공존하고 있다.

亞·太經濟圈이 지니는 이러한 성격은, 여타의 地域협력체들이 공통된 문화, 역사적 배경과 경제발전단계의 유사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경제발전단계 및 구조의 다양성에 따른 각국간 비교우위구조의 선명한 차이는 상호보완관계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할 때 오히려 산업구조상의 상호보완성을 높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³⁾

3) 李建雨, "世界貿易自由化와 亞·太地域協力", 世界經濟動向, 産業研究院, 1991. pp. 70-71.

〈表 Ⅲ-1〉 亞·太地域의 다양성(1990)

국 가	면 적 (1,000km ²)	인 구 (백만명)	GDP (백만\$)	국민소득 (\$)
일 본	378	123.5	2,942,890	25,430
미 국	9,373	250.0	5,392,200	21,790
캐 나 다	9,976	26.5	570,150	20,470
호 주	7,687	17.1	296,300	12,680
뉴 질 랜드	269	3.4	42,760	17,000
한 국	99	42.8	236,400	5,400
대 만	36	20.2	146,860	8,000
홍 콩	1	5.8	59,670	11,490
싱 가 포 르	1	3.0	34,600	11,160
태 국	513	55.8	80,170	1,420
말 레 이 지 아	330	17.9	42,400	2,320
인 도 네 시 아	1,905	178.2	107,290	570
필 리 핀	300	61.5	43,860	730
중 국	9,561	1,133.7	364,900	370
표 준 편 차	4,012.9	284.9	1,481,338.0	8,331.2

資料 :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92.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92.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World Factbook", 1991.

2) 亞·太경제의 다이내미즘(Dynamism)

亞·太경제의 다이내미즘은 同 地域이 지난 20년간 보여준 놀라운 고도성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日本을 위시한 ANIES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어 同地域은 「세계의 성장센터」라고 칭하여 질 정도로 경제신장은 괄목할만한 것이었다. (〈표 Ⅲ-2〉참조)

이 地域의 다이내미즘한 경제발전은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서 급진전하였다. 그요인으로는 日本과 ANIES의 급속한 공업화이며 이는 ASEAN제국과 중국으로 파급되고 있다. 특히 日本, ANIES, ASEAN제국들은 공업화의 발전단계에 따라 각국은 서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재화를 수출하는 형태의 분업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업의 발전단계를 높혀감으로써 이 地域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亞·太地域의 전반적인 고도성장 이외에 同 地域의 다이내미즘을 잘 나타내주는 것으로는 제조업 부문의 발전을 들 수 있다. 〈표 Ⅲ-2〉의 GDP성장률 및 제조업성장률을 보면,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4) 21世紀の太平洋地域經濟構造研究會報告, 太平洋時代の展望, 1985, pp.1-2.

여과로 제조업부문의 부진이 두드러졌던 80년대 전반에도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등의 경우 제조업부문의 성장이 GDP성장을 크게 앞질렀으며, 80년대 후반에는 홍콩과 대만을 제외한 모든 중진국 및 개도국들이 두자리수의 제조업성장을 기록하였다. 이와같은 제조업부문의 빠른 팽창은 同 地域경제의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경제간의 경쟁의 격화를 통해 다이나미즘의 유지에 공헌하였던 것이다.

〈表 Ⅲ-2〉 亞·太경제의 GDP성장과 및 제조업 성장률(%)

성장률 및 년도 국가	GDP성장률		제조업 성장률	
	1980~85	1985~90	1980~85	1985~90
<u>NIES</u>				
한국	8.4	10.8	10.8	13.3
싱가포르	6.2	7.9	1.2	12.7
홍콩	5.6	7.8	5.8	6.2
대만	6.8	9.2	6.5	6.2
<u>ASEAN</u>				
인도네시아	4.7	6.3	8.7	13.0
태국	5.5	10.0	0.4	14.2
말레이시아	4.8	7.5	6.7	10.9
필리핀	-1.0	4.6	19.2	14.8
<u>기타</u>				
중국	10.1	7.9	12.1	14.6
<u>선진국</u>				
미국	2.6	2.8	3.1	3.7
일본	3.8	4.7	3.6	4.7
캐나다	2.9	3.1	3.0	3.7
호주	3.2	3.3	0.8	2.8
뉴질랜드	2.8	0.7	2.7	-1.0

資料 : PECC, Pacific Economic Development Report 1992~1993, Singapore, 1992.

3) 相互依存的 貿易構造

亞·太地域이 그동안 고도의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亞·太地域내 貿易의 相互補完의 구조, 성장촉진적 分業關係 등 여타地域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域內 貿易구조상의 互惠性이 작용하였으며 동시에 이것이 각국의 공업정책을 지지·보완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객관적인 지표상으로 볼 때 아·태지역내에서의 상호 무역의존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Ⅲ-3〉 참조) 즉, 상호의존성을 논할 때 흔히 언급되는 역내 무역비중만을 놓고 보면,

1990년 현재 EC 12개국과 APEC 14개국(중국 제외)은 각각 60.8%와 61.3%를 기록하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해당지역의 수출이 특정지역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 가를 측정하는 지역화계수는 그 값이 1보다 큰 경우 해당지역의 상호의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1990년 현재 APEC은 1.74를 기록하여 1.54를 기록한 EC보다 더 높게 나타내고 있다.

<表 Ⅲ-3> 주요地域의 域內 및 域外 交易構造의 變化

(단위 : %)

	무역비중계수			지역화계수		
	1970	1980	1990	1970	1980	1990
EC						
세계전체	100.0	100.0	100.0	1.0	1.0	1.0
EC	<u>55.7</u>	<u>53.9</u>	<u>60.8</u>	<u>1.49</u>	<u>1.45</u>	<u>1.54</u>
북미	12.1	8.1	8.2	0.55	0.50	0.43
동아시아	3.4	4.0	6.6	0.31	0.22	0.32
APEC	16.8	12.4	15.0	0.49	0.38	0.39
동아시아						
세계전체	100.0	100.0	100.0	1.0	1.0	1.0
EC	12.8	11.3	15.1	0.38	0.38	0.43
북미	30.4	22.3	26.3	1.78	1.88	1.64
동아시아	<u>28.4</u>	<u>32.3</u>	<u>33.9</u>	<u>2.82</u>	<u>2.45</u>	<u>1.99</u>
APEC	63.2	57.4	62.8	2.18	2.24	1.85
북미						
세계전체	100.0	100.0	100.0	1.0	1.0	1.0
EC	23.3	18.9	18.5	0.69	0.60	0.51
북미	<u>38.4</u>	<u>33.2</u>	<u>38.1</u>	<u>1.98</u>	<u>2.50</u>	<u>2.19</u>
동아시아	15.7	18.5	25.8	1.37	1.22	1.29
APEC	69.7	48.9	60.9	1.69	1.73	1.68
APEC						
세계전체	100.0	100.0	100.0	1.0	1.0	1.0
EC	20.5	15.6	17.0	0.60	0.49	0.46
북미	34.1	26.5	30.6	1.83	2.09	1.80
동아시아	20.7	25.8	30.9	1.95	1.87	1.75
APEC	<u>55.3</u>	<u>52.2</u>	<u>61.3</u>	<u>1.85</u>	<u>1.93</u>	<u>1.74</u>

- 주 : 1. 북미 : 美國, 캐나다, 멕시코
 동아시아 : 日本, ANIES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ASEAN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APEC : 북미(멕시코 제외) + 동아시아 + 오세아니아(호주 및 뉴질랜드)
2. 貿易비중계수는 해당地域과 貿易액(수출 및 수입액의 합계)을 세계 전체에 대한 貿易액으로 나눈 비중(%)임. 이때 수입은 상대방의 수출을 지칭함.
3. 地域화계수는 해당地域에 대한 수출 비중을 해당地域이 세계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조정한 것임(X_{ij}/X_i) (M_j/M_w).

資料 : IMF, *Direction of Trade*, 각호.

한편 <表 Ⅲ-4>는 ANIES 및 ASEAN제국들의 美國·日本과의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亞·太域內에서의 貿易구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생산재와 중간재확보에 있어서 日本과 ANIES, ASEAN과의 강한 구조적 연계(Linkeage)를 보여 주고 있다.

<表 Ⅲ-4> 아시아 諸國들에 의해 유발된 美國·日本の 생산

誘發國 産業부문	일 본					미 국				
	필 리 핀	말 레이 지아	싱 가 폴	태 국	한 국	필 리 핀	말 레이 지아	싱 가 폴	태 국	한 국
식료품·음료										
섬유·피혁제품	●	●	○	○	●	○	○			○
목재·목재제품			●					○		○
펄프·지제품·인쇄	●		●	○	○				○	○
화학제품	○	●	●	●	◎			○		○
석유정제										
고무제품		●		○	◎	○				○
비금속광물제품			○							
금속제품	○	◎	◎	●	◎					●
기계	●	○	●	●	◎		○	●		●
수송기구	●	●	◎	◎	◎	○				○
기타 제조업	○	●	●	○	●	○				○
건설	●	○	●	○	○			○		

◎ 誘發係數 0.4이상

● 誘發係數 0.2-0.4

○ 誘發係數 0.1-0.2

(資料) Shunichi Furukawa, International Input-Output Analysis, Tokyo :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cs, 1986.

4) 域內에서의 貿易불균형의 확대 및 貿易마찰의 심화

亞·太地域內에서는 상호의존성 못지않게 域內제국간 경제 및 貿易상의 마찰과 경쟁도 동시에 심화되고 있다. 특히 貿易마찰은 美國, 日本, ANIES간의 성장율격차와 貿易불균형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아시아 地域의 급속한 공업화를 배경으로 日本과 ANIES의 대미수출이 급증하면서 域內국간 貿易불균형이 심화되었다.⁵⁾

5) Young Soogil, Trade Policy Issues in the Pacific Basin, KDI, 1987, pp.40-42.

亞·太地域의 貿易불균형의 크기는 외견상 EC와 비슷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크게 다르다. 우선 域內 최대 경제대국인 日本과 美國이 가장 심각한 貿易불균형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지난 70년과 90년을 비교하면 양국 모두 貿易불균형이 현저히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미-일간 貿易불균형의 심화로 인한 현재의 미-일간의 마찰은 이제 양국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ANIES와 日本간의 貿易마찰도 역시 ANIES의 대일 貿易수지적자에 기인하고 있으며, ASEAN제국들도 공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ANIES가 美國이나 日本에서와 같은 형태의 貿易마찰이 격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表 Ⅲ-5〉 주요地域別 域內貿易不均衡 추이 비교

년 도	EC	북미	동아시아	APEC
1970	0.17	0.18	0.27	0.18
1980	0.13	0.12	0.34	0.26
1990	0.15	0.08	0.29	0.18

주 : 1. 북미 : 美國, 캐나다, 멕시코

동아시아 : 日本, ANIES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ASEAN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APEC : 북미(멕시코 제외) + 동아시아 + 오세아니아(호주 및 뉴질랜드)

2. 위 수치는 수출특화지수 $(X-M)/(X+M)$ 의 표준편차를 지칭함.

資料 : IMF, *Direction of Trade*, 각호.

IV. 亞·太地域內 經濟協力體 構想

1. 域內 統合관련 諸構想의 전개과정

亞·太地域에 있어서 域內제국간 經濟協力을 위한 制構想案은 제안자와 제안국가에 따라 그 접근 방법, 統合의 형태, 목표와 기능, 참가국의 범위, 統合의 절차 등을 달리하면서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域內的 經濟協力 공동체에 관한 論議의 효시가 된 것은 1947년 UN경제사회이사회의 산하기구로 설립된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 : Economic Commission for Asia Far East)이었다.

그러나 亞·太地域에서의 地域協力論議가 본격화된 것은 1958년 EEC이 형성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地域주의가 확산되면서, 1965년 日本의 고지마가 EEC에 대응하는 태평양판 경제공동체로서 美國, 캐나다, 日本, 호주, 뉴질랜드를 회원국으로 구성하여 EC형의 정부간 自由貿易 실시를 주장하는 소위 太平洋自由貿易地帶(PAFTA : Pacific Free Trade Area)案을 提示하면서 부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小島清은 PAFTA안의 현실성의 결여로 호응도가 낮자 1968년 濠洲의 Peter Drysdale과 함께 태평양 원조개발기구(Organization for Pacific Trade, Aid and Development)안을 제안하였고 이 후 1979년 7월 Patrick와 Drysdale은 미 상원의 동아시아·태평양 관계 소위원회 주관하에 太平洋貿易開發機構((The Organizatin for Pacific Trade Aid & Development : OPTAD)構想案을 발표하였다. 1980년 5월 오오히라 日本 수상의 정책자문기구인 환태평양 연대연구소는 “환태평양 연대연구그룹 보고서”란 형식으로 環太平洋 連帶案(Pacific Basin Cooperation : PBC)을 발표하였다. 이후에도 호주의 부수상 메컴플레이즈는 1980년 9월 日本의 오오히라 수상과 함께 태평양 經濟協力회의를 공동 발표하였으며, 최근에 이르러 1989년 11월 호주의 호크수상의 제안에 의해 경제각료회의가 호주 캔버라에서 열렸다.

이상과 같이 태평양地域에서의 統合관련 諸提案은 60년대 부터 日本, 호주, 美國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제시된 대표적인 태평양 경제공동체 構想으로서는 小島清의 PAFTA案, Peter Drysdale의 OPTAD案, 환태평양 연구그룹의 PBC案을 들 수 있으나 대개가 그 실현 가능성에 있어 제고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으며 공동체의 실현이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실효성에 있어 크게 의문시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亞·太地域 국가간의 經濟協力에 관한 同構想案들은 일종의 신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이 地域 선진국들의 견해를 制度化 하려는 움직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동 構想案들이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하기까지에는 亞·太地域의 제반여건상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21세기까지를 구현시기로 잡고 ‘진밀한 연대감’에 입각하여 경제·사회·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地域공동사회를 건설하여 域内국가의 복지와 번영을 추구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어 그성격상 장기협력構想이라 할 수 있다.

2. 최근의 주요 經濟協力 추진현황

전술한 아시아-태평양地域내 협력체 수립에 따른 여러가지 현실적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최근 나타나는 세계貿易질서의 변화 속에서 亞·太地域내 협의체 構想은 더욱 더 활발하게 논의되어지고 있다. 또한 亞·太地域이 지난 70년대 이후 이룩한 높은 경제성장과 貿易확대 과정에서 나타난 상호의존도의 증대와 함께 域内국가간 마찰이 증대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域内국가간 마찰을 조정하고 여타地域에서의 地域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地域차원에서의 협력필요성이

크게 증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아시아-태평양地域 내에서는 최근 가시적인 윤곽이 드러고 있는 것으로서 크게는 APEC(亞·太經協력 각료회의)을 중심으로 域內 貿易自由화의 논의가 일고 있으며 작게는 ASEAN(동남아국가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국지經濟圈, 그리고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말레이시아가 제안한 동아시아 경제협의체(EAEC)構想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아시아-태평양地域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經濟協力 構想과 관련된 여러 움직임을 살펴보고 그 형성전망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APEC(Asia Pacific Economic Corporation Ministerial Meeting)

APEC(亞·太 經濟協力 각료회의)는, 1960년대 이후 민간차원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어온 亞·太地域 經濟協力 構想을 토대로, 특히 그동안 산·학·관의 3자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정치적 색채가 적은 소위 「환태평양 Think Tank」의 역할을 수행하여 온 PECC(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의 역사적 경과가 하나의 배경이 되어⁶⁾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창설된 정부차원의 최초의 협의체라 할 수 있으며, 현재 한국, 日本, 대만, 홍콩, 중국, ASEAN 6개국, 美國,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APEC의 구성 및 운영체제로서 APEC는 貿易 진흥, 투자 및 기술이전, 인력자원개발, 에너지협력 등 10개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실무회의의 결과는 고위실무회의에 보고되고 각료회의에서 각 협력사업결과를 추진하고 域內經濟協力の 기본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APEC은 그 후 활발한 활동을 보여 91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각료회의에서는 UR협상의 추진을 지지하는 「APEC선언」을 행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말레이시아의 수상이 제안한 「EAEC構想」에 대하여 美國은 「APEC이 순조롭게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과 경합되는 다른 경제그룹이 왜 필요한가」라는 표현을 통하여 「EAEC構想」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APEC의 상설기구화의 찬성등 APEC에 대한 보다 능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향후 APEC은 냉전 종결후 아시아-태평양地域 협의체의 핵이 될 것으로도 전망되어 진다.⁷⁾

APEC은 현재 개방된 地域주의(open regionalism)를 표방, 경제 협력화 가능성을 스스로 부인하면서 UR로 대표되는 다자간주의의 보완과 域內국가의 실질적인 경제 협력 중진을 주된 활동 목표로 하고 있다.

APEC은 EC와 같은 亞·太地域의 경제統合體를 겨냥한 조직이라기 보다는 域內 국가간 정보 및 의견 교환과 대외 개방적인 域內自由貿易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간 협의체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經濟協力체제가 결성된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내부여건 즉 회원국간

6) 江口雄次郎, "太平洋 經濟協力の現段階と展望", 世界經濟評論, 1992, 5, pp.36-37.

7) 江口雄次郎, Ibid., pp.36-37.

의 경제발전의 격차, 정치·문화적 이질성, 미·일, ASEAN 등 참가국간의 이해관계의 상충 등을 고려할 때 APEC 전체가 自由貿易협정(FTA)이나 EC와 같은 경제統合體보다는 OECD의 태평양판에 가까울 것이며 그 내부에 NAFTA, ASEAN,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의 소집단(sub-group)을 포괄하는 협의체로 진전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2) ASEAN 自由貿易지대(ASEAN Free Trade Area : AFTA)

1992년 1월 27-28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4차 ASEAN 정상회담에서 ASEAN 自由貿易지대결성을 합의하였으며, 이를 위해 「ASEAN 自由貿易지대 창설을 위한 공동유요 특혜관세제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동협정에 따르면 ASEAN제국은 현재 域内교역상품에 대한 평균 30%를 웃도는 각국의 수입관세를 향후 15년 이내에 5%이하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한편 비관세장벽의 철폐도 병행 추진하여 2008년부터는 ASEAN 自由貿易지대의 창설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AFTA 협정의 특징은” 먼저 관세의 일괄인하(ACROSS THE BOARD)의 실시이다. 그동안 ASEAN 域内貿易自由화의 조치는 품목별 인하였으며 그 효과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취해진 일괄인하 방식은 종래의 결합을 없앤 진정한 의미에서의 域内貿易自由화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2의 특징은 관세의 인하가 대폭으로 행해져 15년후 또는 그 이전에 제로 퍼센트로 낮추는 것이며, 제3의 특징은 아세안 각국의 관세율의 공통화가 행해진다라는 점이다. 협정 실시 5년후(1998년) 또는 8년후(서기 2100년)에는 아세안 각국의 공업품의 세율은 모두 20%이하로 된다. 제4의 특징은 관세의 인하계획이 사전에 공표된다는 점이다. 즉 관세율이 사전에 발표되는 것에 의해 민간기업은 즉각 산업조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경제원칙에 기초해서 그리고 경쟁노력에 의한 장래의 ASEAN 경제가 최적의 상태로 구축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의 ASEAN은 그 성격에 비추어 볼 때, EC와 같은 경제統合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고 經濟協力を 추구하는 일종의 개발地域주의(developmental regionalism)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SEAN은 경제統合 단계의 시각에서 보면 가장 초보적인 특혜貿易지대(Preferential Trade Area)에 속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AFTA와 동일하게 自由貿易지대로 출범하게 되는 북미自由貿易협정(NAFTA)이 제조 상품뿐 아니라 농산물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은행, 증권, 보험 등 서비스시장 개방, 투자제한규정 철폐, 지적소유권保護 강화, 원산지규정 강화 등 타결내용이 광범위한데 반해 AFTA의 타결내용은 한정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ASEAN 自由貿易지대의 결성은 ASEAN의 성격을 이러한 經濟協力 단계에서 경제統合 단계로 발전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는 ASEAN을 종전의 기능적 統合으로부터 제도적 統合의 단계로

8) 山澤逸平, “と地域貿易自由化”, 世界經濟論評, 1992. 5. pp.46-47.

9) 古川榮一, “日米貿易交渉 - アジアン自由貿易團(AFTA) ” 貿易と關稅, 1992. 11. pp.22-23.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써 장기적으로 EC와 같은 공동시장이나 경제동맹 같은 좀더 높은 단계의 統合體로 다양하게 전개시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는 것이다.¹⁰⁾

3) EAEC(East Asia Economic Caucas)

세계의 경제성장 중심地域으로 부상한 동아시아地域에서 地域經濟圈 형성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90년말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결렬된 직후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가 동아시아經濟圈(EAEC : East Asia Economic Group)構想을 제안함으로써 촉발된 이 地域의 經濟圈 형성논의는 핵심국가인 日本의 참여에 美國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당초 構想대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마하티르의 당초 構想은 기존의 동남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과 한국, 홍콩, 대만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ANIES), 중국과 日本을 비롯 베트남, 라오스 등 인도차이나 3국을 포함한 地域經濟圈을 형성, 세계적인 경제블럭화 현상에 대비하자는 것이었다.

ASEAN과 ANIES, 日本, 중국 및 인도차이나 3국의 시장규모를 보면 90년말 현재 인구는 16억 7천 5백만명, 국민총생산(GNP)은 약 4조1천 3백억달러 수준이다. 이는 인구면에서 10억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EC의 3억2천3백만명, 美國과 캐나다의 2억7천만명을 상회하는 규모이며 GNP에 있어서는 美國과 캐나다의 약 6조달러, EC의 약 5조9천억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더구나 아시아 地域에는 한국, 대만 등 신흥공업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급속히 성장하는 국가들이 있어 2000년대에는 EC는 물론 북미地域을 능가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ASEAN과 동아시아地域의 모든 경제주체를 하나의 단일 經濟圈으로 묶어야 한다는 마하티르의 構想은 ASEAN 회원국 일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동아시아地域의 保護주의 형성을 우려하는 美國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美國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한 마하티르총리는 1991년 당초 構想에서 상당히 완화된 동아시아 경제협의체(EAEC)를 제안했다. 이는 상설기구화와 블럭화를 지향하지 않고 국제경제무대에서 필요할 경우 상호관심분야에 대한 공동보조를 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美國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어 EAEC가 EC나 NAFTA와 같은 경제統合을 이룰 가능성은 크지 않은 실정이다.

日本은 물론이고 한국, 대만등 EAEC에 참여를 요청 받은 국가들이 對美의존적 수출구조를 가진 점도 EAEC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EAEC가 경제블럭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음에도 관심을 끄는 것은 90년대 세계경제성장을 주도할 국가들이 모두 이 地域에 있고 또한 이들의 성장배경이 되고 있는 日本의 영향력중대라는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10) 尹相喆, "ASEAN 自由貿易地帶(AFTA)의 推進方向과 評價" 世界經濟動向, 1992. 10, pp. 21-22.

〈表 IV-1〉 亞·太地域의 주요 經濟協力 추진현황

	APEC	AFTA	EAEC
참가국 (대상국)	미국, 일본, 중국, 아시아 NIEs 4개국 ASEAN 5개 국, 호주, 뉴질랜드	ASEAN 6개국	일본, 중국, 아시아 NIEs 4개국 ASEAN 5개국, 미 얀마 베트남
추진경위	89년초 호주 제안 89년 11월 이후 4차례 회담개최	91년초 태국 제안 93년 1월부터 추진	90년말 말레이시아 제안
성격	무역진흥, 투자 및 기술이 전 활성화, 인력협력개발 등 기능별 협력추진	1993-2008기간중 자유무역권 형성· 공동특혜관계(CERP) 도입·비관세장벽철폐	국제협상시 공동보조, 역내 국의 무역 및 경제협력 강 화
전망	· 회원국간 다양한 이해관 계로 협력방향 및 역할 불투명 · 역내무역자유화 주요과제 로 부상	· 제한적 대상품목및 예외 인정으로 자유화의 효과 는 미지수 · 회원국간 경쟁적 이해관 계 상존	· 미국의 강력한 반대로 성 사여부 불투명 · 경제블럭보다는 현 APEC 형태의 협력체 전 망

주 : *말레이시아의 제안 당시 構想에 근거

資料 : 魯在峯·柳在元(1993)¹¹⁾ 참조.

이상에서 볼 때 세계 경제의 블록화 추세는 1990년대 세계 교역질서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조류임에 틀림이 없다. 결국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經濟圈의 構想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地域別 블록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내부적으로 나타나는 域內 제국간 상호의존도의 증대 및 貿易마찰을 사전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域內제국들의 현실적 요구와 필요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3. 經濟協力構想에 대한 각국의 입장

1) 美國

美國은 域內에 안보·전략적 차원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貿易적자의 해소, UR추진, EC統合 대응, 투자 및 서비스부문 교역확대 등 경제현안 해결을 위해 域內 각국의 협조를 필요로 하였다. 아울러 域內에 진출한 美國기업의 이익保護와 일부 천연자원의 안정적 공급선 확보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11) 魯在峯·柳在元, "亞·太經濟協力の展望과 韓國의 選擇", 블럭화時代의 亞·太經濟협력, 대외經濟政策研究院, 韓國太平洋經濟協力委員會, 1993.3 p.61.

이에 따라 亞·太협력을 위한 정부차원의 다자간 협의체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최우선적 정책목표는 UR협상의 성공적 타결에 두고 APEC을 포함한 亞·太협력 논의과정 자체를 UR타결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코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域內국 특히 ASEAN의 반발을 우려하여 美國이 주도하지 않고 域內국과의 Consensus를 추구하며, 창의적 책임분담론을 강조하여 日本, ANIES의 시장개방 및 역할 증대를 요구하고 있다.

APEC에 대해서는 새로운 貿易블럭으로 발전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대신 APEC의 상설기구화에는 찬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APEC 고위실무회의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APEC 추진 6개 협력프로젝트에의 간사국참여도 포기하여 왔으나 93년 11월 美國에서 제5차 회의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亞·太地域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2) 日本

日本은 천연자원 등 주요 1차산품의 안정적 공급과 수출시장, 투자대상지 확보 및 域內국 진출 日本기업의 이익保護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안정된 국제교역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美國, ANIES와의 통상마찰을 다자간 협의방식으로 처리하며 小地域차원의 경제블럭형성에 의한 잠재적 위협요소를 중화하고 ASEAN등 저임금국가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日本의 기본입장은 日本경제력의 지속적 성장에 따라 IMF, GATT체제하의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地域협력에의 참여가 자칫 域內 개도국의 대일시장 개방과 기술이전 요구 압력을 집단적으로 제기하여 日本의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하에 기존의 주도적 입장에서 탈피, 명분보다 실리위주로 亞·太經濟協力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亞·太經濟協力の 주대상국으로 삼는 ASEAN과 아시아NIES의 의견을 존중, 이들 국가의 주도원칙하에 기술 및 자본공급을 통한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이들 국가의 산업구조 조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되 장기적으로 日本에 유리한 수평분업체제를 구성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민간주도로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며, 정부와 학계는 정보교류 및 수집, 분위기조성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3) ASEAN

ASEAN은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수출산업 육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 경제개발 과정에서 美國, 日本, 아시아NIES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고 ASEAN에 유리한 국제분업 구조로의 재편을 유도하는데 기본목표를 가지고 있다.

美·日の 경제적지배를 제도화할 우려와 함께 ASEAN의 결속약화, ASEAN이 추구하는 비동맹 중립노선의 손상우려, 이미 域內 선진국들과의 별도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있는 관계 등으로 ASEAN

은 亞·太경제統合構想에 비교적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ASEAN이 제시하는 亞·太협력의 기본입장은 민족주의적 입장 반영, 비교우위의 원칙이 아닌 개도국에 대한 배분원칙의 중시, 남북문제의 해결과 비동맹원칙의 준수, 기존기구와의 조화추구, 地域협력의 이해관계에 대한 청사진 제시가 경제統合제도화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社會主義圈

러시아는 경제개혁의 추진과 함께 美國, 日本, 아시아NIES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고 시베리아, 극동地域 개발에 日本과 한국의 참여를 유도하며, 亞·太地域 안보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域內 군비축소와 地域협력 참여를 통한 영향력 제고, 대미·일 관계의 긴밀화를 추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따른 기본입장은 정치, 안보, 경제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유럽안보회의(CSCE)와 같은 포괄적 기구로 상설화하며, 日本, 아시아NIES 등 고성장 국가의 자본과 기술력을 유치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다.

中國은 현대화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과 기술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안정적 시장확보와 域內에서의 정치·안보적 영향력을 유지하는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직 중국은 亞·太地域 經濟協力構想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표명은 않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美·日이 주도하지 않고, 회원국의 외교관계에 간섭하지 않으며, 개방적인 經濟協力에 중점을 둘 것을 희망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亞·太협력이라는 다변적 협력회의에 중국내 학자들을 중심으로 홍콩, 대만, 중국의 華僑圈을 중심으로 한 “大中華經濟圈”이나 日本, 한국, 북한, 러시아, 중국 등을 연결하는 “東北亞經濟圈 構想 등을 거론하고 있다.

5) 韓國

세계경제의 불려화 추세와 선진제국과의 통상마찰 심화에 따른 경제적 고립으로부터의 타개, 동북아 긴장해소 및 평화무드 정착 등의 정치·안보적 고려와 국제무대에서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외교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안정적 시장 및 천연자원 확보,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습득 등이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亞·太經濟協力構想에 임하는 기본입장은 주권존중과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기존기구를 보완하고 경제적 문호를 개방하며 경제불려화는 배제한다는 것이다. 또한 非政治·非軍事的 協力體를 지향하여 교역, 투자, 기술이전, 문화교류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을 추구하며 중·러 등 공산권 국가의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향후 經濟協力構想의 기본방향은 우리경제의 여건 및 구조변화와 연계시키고 亞·太협력체의

발전양상에 대응하는 단계별 전략을 마련 추진하는 것이다. 경제기획원의 3단계 협력방안에 의하면, 제1단계는 90년대 전반까지 貿易중심의 協力期로 강화로 다자간 방식에 의한 통상마찰의 해소, 域內 공동의 貿易분쟁 해결방안 마련 및 공식·비공식정보채널 구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2단계는 90년대 후반까지 광역 분업체계의 構築期로 자본집약적 산업의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비교열위산업의 해외이전 및 자본재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를 목표로 한다. 또한 기술, 투자, 생산의 유기적 상호분업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술의 域內교류를 제도화하고 對개도국 자본협력과 공정간 분업방식의 확대, 직접투자 및 域內분업의 저해요인을 발굴하여 제거한다. 마지막 제3단계는 2000년대부터 대외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생산요소의 域內 自由이동을 확대하고 대ASEAN협력강화와 공업화를 지원한다는 정책이다.

4. 域內 經濟協力體의 構想

亞·太地域은 각국의 經濟發展 단계나 制度상의 이질성으로 인하여 EC와 같은 형태의 經濟統合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制度的 側面에서 亞·太地域에서는 회원국 정부간 합의에 의하여 經濟統合의 조건 및 형태를 결정짓고 이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는 것 (Institutional Integration)이 어렵다. 이는 經濟統合을 하나의 과정으로 볼때 亞·太地域에서 經濟統合의 기초 단계인 自由貿易地帶 조차 그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약 아·太地域 전체를 하나로 묶는 經濟統合體를 구성한다하더라도 經濟統合의 성격상 EC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될 수 밖에 없으며 대상地域은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亞·太地域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制度的 統合이 극히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때 그 대안으로서 가능한 국가들부터 단계별로 추진하는 方案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Kojima 교수가 60년대 중반 제안한 PAFTA(The Pacific Free Trade Area)構想 이후 이러한 방안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亞·太地域 선진 5개국 (美國, 캐나다, 日本, 호주, 뉴질랜드)을 대상으로 自由貿易지대 형성을 골자로 하는 PAFTA案은 대상국간의 이해관계의 상충 및 美國의 다자간 접근방식 우선원칙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판정을 받았다.¹²⁾ 다자간 貿易 체제의 전망이 극히 불투명한 90년대에 와서도 美·日間 自由貿易地帶 가능성의 희박함을 고려할 때, 北美自由貿易地帶가 日本 및 호주, 뉴질랜드까지를 포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성급한 전망이라고 하겠다.

한편 亞·太地域에서 制度的 統合이 아닌 機能的 統合을 추진한다고 할 때, 신속적인 정책협조를 위한 정부간 협력체로서의 성격을 강조한 OPTAD(Organization for Pacific Trade and Development)안을 우선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OPTAD案의 代案으로 주로 日本 및 호주측에서

12) Kojima, Kiyoshi, Japan and a Pacific Free Trade Area, University of Tokyo Press, 1971.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70년대 말 美國의 亞·太經濟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각광을 받게 되었다. 1979년 美國 상원에 제출된 Drysdale과 Patrick 교수에 따르면,¹³⁾ 기본적으로 OPTAD는 다자간 체제의 테두리를 유지하면서 기능적 統合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협의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협의의 중점을 정보 및 견해의 교환을 위한 비공식적 대화에 두고 있다는 데에서 확인될 수 있다.

OPTAD案이 강조하고 있는 機能的 統合의 중요성 및 이를 위한 정책 협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협력이 亞·太地域의 경제적 역동성을 유지·발전시키는데 과연 효과적일 것인가 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OPTAD案은 정책지향적인 과제를 다룰 위원회 활동의 범주에 대한 협상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나, 비공식적 자문성격의 정책협의를 통해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政策協議는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가치를 가진다는 면에서 실행가능한 중간목표의 설정과 이를 성취하기 위한 의무 분담이 실질적 협력증진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상의 論議에서 亞·太 經濟協力은 제도적 統合보다는 시장기능의 활성화에 의한 기능적 統合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은 자명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양자의 입장이 반드시 배타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기능적 統合이 제도적 統合을 위한 기반조성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 또는 후자가 전자를 위한 방과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등 亞·太地域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亞·太域內 經濟協力體의 구성을 위한 향후의 과제는 무엇보다도 地域的 특수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經濟成長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域內貿易의 지속적·안정적 성장 및 직접투자 및 기술이전의 활성화가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는 域內경제전망 (regional economic outlook) 작업을 중심으로 政策協助 및 調整機能이 강화되어야 하겠다.

IV. 결 론

亞·太 經濟統合構想에 관한 논의는 전후 세계질서의 변화에 따른 地域別 불력화라고 하는 외적 요인과 함께 상호의존도의 심화 등 하나의 經濟圈으로 성숙된 아시아-태평양 經濟圈의 부상이라는 내적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亞·太地域은 지난 30년간 지속된 고도성장과 域內국가간 交易의 확대, 투자의 증가에 힘입은

13) Drysdale, Peter and Hugh Patrick, "An Asian-Pacific Regional Economic Organization : An Exploratory Concept Paper," July 1979.

호혜적 상호의존관계의 심화로 「실질적인 경제統合」의 과정을 밟아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亞·太地域의 경제統合을 유럽연합(EU)이나 북미自由貿易지대(NAFTA)와 같은 「제도적 경제統合(institutional integration)」에 견주어 「市場주도형 경제統合(market-oriented integr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970년대 이후 亞·太地域은 세계 총貿易의 1/3을 차지하는 등 세계경제의 중심권으로 부상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地域내 국가간의 상호의존도의 증대와 地域내 마찰이 증대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地域차원에서 협력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亞·太地域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地域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가능성을 보인다. 이 地域이 앞으로 계속 세계경제활동의 중심지로 남아 있을 수 있기 위해서는 공동협력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많은 국가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개도국 발전지원, 날로 심각해지는 貿易분쟁의 해결, 공동번영을 통한 이 地域에 있어서의 배분적 정의 실현이라는 면에서 地域的 공동협력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亞·太地域의 經濟協力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협력의 인식보다는 협력의 방법에 있다 하겠다.

그러나 亞·太地域의 국가들은 정치, 문화 등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經濟發展의 단계가 상이하 여, 따라서 亞·太地域에서의 협력형태는 획일적인 협력기구에 의하기 보다는 多元的 協力體의 성격을 띤 광역經濟圈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亞·太地域協力は 본질적으로 개방적이며 대외지향적인 이념에 기초를 둔 개방적 지역주의를 추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開放的 地域主義를 추구하는 APEC의 성공적 발전은 가장 바람직한 代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開放的 地域主義의 實踐, 즉 APEC회원국들의 자발적 자유화를 통한 廣域經濟協力體의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유화를 추진하는 당사국이 자유화로 부터 얻어지는 결실의 최대 受惠者라는 공동인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金學洙, 韓國의 對外經濟協力에 관한 政策課題와 方向, 政策研究 91-11,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1.
- 魯在峯·柳在元, “亞·太經濟協力の 展望과 韓國의 選擇”, 블럭화時代의 亞·太經濟協力,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韓國太平洋經濟協力委員會, 1993, 3 p. 61.
- 尹相喆, “ASEAN 自由貿易地帶(AFTA)의 推進方向과 評價” 世界經濟動向, 1992, 10.
- 李建雨, “世界貿易自由化와 亞·太地域協力”, 世界經濟動向, 産業研究院, 1991.
- 李掌魯, “亞·太地域 經濟協力과 ASEAN”, 亞細亞研究, 高麗大 亞細亞研究所, 1992, 2.
- 韓國銀行, “亞·太地域 경제블럭 추진현황과 對應方案”, 外換管理部 外換分析課, 1992.
- 韓昇洙, 太平洋時代와 韓國, 産業研究院, 1989.
- 江口雄次郎, “太平洋 經濟協力の 現段階と展望”, 世界經濟評論, 1992, 5.
- 山澤逸平, “ウルグアイ·ラウンドと地域貿易自由化”, 世界經濟論評, 1992, 5.
- 古川榮一, “日米貿易交渉 - アシアン自由貿易團(AFTA)” 貿易と關稅, 1992, 11.
- Boyd, G., Pacific Trade, Investment and Strutral Change in Pacific Asia, Pinter Publishers, London and New York, 1989.
- Elek, Andrew, “Trade Policy Options for the Asia-Pacific Region in the 1990'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1992.
- M. Dutta, Asia-Pacific Economies : Promise and Challenges, Part A, JAI Press Inc, 1987.
- PECC, “Pacific Economic Development Report 1992-1993”, Singapore, 1992.
- Suh, Jang-Won and Jae-Bong Ro, eds., Asia-Pacific Economic Cooperotion : The Way Ahead, Seminar Proceedings,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990.
- The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acific Dynamism and the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 1992.
- The Malaysian Committee for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Draft Issues Paper Regional Trade Liberalization”, July 1991.